

## VII. 經濟 關聯 社說 抄錄

환경 관리 능력과 환경 자원의 부족, 지자체간 환경 분쟁의 심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환경 지자제는 시범 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

## ■ '환경 행정' 지방 이관 이르다

- 지역 개발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환경지자제의 실시는 시기상조
  - 현재 지자체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별로임
  - 환경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 기초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도 크게 부족한 실정임
  -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상황임
  - 따라서 환경지자제를 시범 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
  - 한편 중앙정부의 기능은 조정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함

(「문화일보」, 97. 4. 16)

현재 경제 불황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, 경기 순환에 따른 호황보다는 기술개발에 의한 경제회생과 도약이 필요

## ■ 저점이 문제가 아니다

- 경기 저점 논쟁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이 중요
  - 현재의 경제 불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
  - 정부와 민간 연구소들은 경기 저점 시기를 올 연말 이전,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전망
  - 일본 노무라 연구소는 한국 경제에 대해 2005년까지 5%대의 성장과 250억 달러 이상의 경상 적자를 전망
  - 경기 순환에 의해 호황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
  - 경쟁력 저하는 인건비에서 비교우위에서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술 격차는 여전하다는 데 있음
  - 경제회생과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임

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4. 18)

## ■ 규제 개혁에의 새 접근

- 규제 개혁을 위한 체계와 방법론의 일신이 주목

규제 법정주의, 신설 규제의 사전심의제, 규제 일몰제 등 제도 도입과 함께 탈 규제를 지향하는 작은 정부 실천이 중요

- 추진 체계의 개선
  - 그동안 분산되었던 추진 체계가 경제 규제는 「경제규제개혁위원회」, 비경제규제는 「행정쇄신위원회」로 통합
  - 경제 규제 개혁 업무를 직·간접 생산자인 재정경제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
- 규제 개혁의 내용 면에서도 획기적 접근이 돋보임
  - 규제 법정주의, 신설규제의 사전심의제, 규제일몰제 도입으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이 기대
  - 규제 총량 및 실명제 도입, 규제 폐지·완화시 담당부서 및 인력의 감축 및 재배치 추진
- 규제 개혁에 충실한 규제개혁기본법의 제정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4. 25)

저물가 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격 결정권 행사, 경쟁 제한적 정책이나 거래 관행의 철폐, 유통 비용 축소를 위한 유통 혁신 등이 필요

■ 「선진경제」 시대의 물가 관리

○ 저물가 시대의 정착을 위한 물가 관리가 필요

- 재정경제원은 물가 정책 방향을 물가지수 관리에서 저물가 구조의 정착으로 전환한다고 발표
  - 가격 결정의 구조를 판매자나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망
  - 신규 사업자의 진입 규제 제한, 최종 판매 가격의 담합 등을 허용하는 법률 조항, 사업자 단체들의 경쟁 제한적 거래 관행 등이 폐지되어야 함
- 유통 단계의 고물가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유통 혁신이 요망
  - 유통 단계 축소와 유통 마진 축소로 소비자 이익의 증진과 저물가 구조의 정착이 가능
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4. 28)

■ 자본재 산업 육성에 더 박차를

- 자본재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, 업계의 공동 노력이 절실

자본재 산업의 국산화와 수출을 통한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차관의 공급 확대, 수도권에서 공장 입지 규제 완화 등이 요망

- 자본재 산업은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
- 자본재 국산화 사업은 95년 5월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에 이어 96년 9월 신경련이 재계 차원의 실행 계획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됨
- 자본재 국산화 계획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
- 산업차관 허용 대상의 확대와 연간 2억 달러인 차관 한도액의 폐지가 바람직함
- 중소기업의 국산화를 위한 대기업의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의 확대
- 수도권 지역에서 자본재 생산 업체의 공장 신·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 일도 시급

(「한국경제신문」, 97. 5. 2)

■ 대기업의 중기 사업 이양

대기업들은 유망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구축하도록 중기사업 이양계획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운사우징, 아웃소싱 등 몸체 줄이기 노력을 지속해야 함

- 중소기업청은 30대 그룹의 사업이양계획을 발표
- 14개 그룹이 활발한 중기사업이양을 추진할 방침
- 현대는 선박용 엔진 부품, 굴착기 부품 등 10개 사업을, LG는 매출액 기준 500억 원 규모의 6개 품목을 중소기업에 이양
- 한솔 그룹도 저속 모뎀, 통신장비 부문 등 7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계획
- 앞으로도 대기업들의 중기 사업 이양 계획은 확대되어야 할 것임
- 최근 일련의 대기업 부도 사태는 유망 업종에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 조정 필요성을 제기
- 대량 실업 시대에 있어 실업 문제의 해결사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화
- 대기업들은 다운사우징, 아웃소싱 등 신경영 기법의 도입으로 몸체 줄이기를 지속해야 함
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5. 6)